

G-Welfare Weekly Report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1. 누구나 무료로 대학 강좌 수강 시대 개막: MOOC

01 주요 내용 및 현황

-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MOOC 열풍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참여 대학과 제공 강좌 수 그리고 수강생 수가 급증하며 학습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있음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s) : 대중들에게(Massive) 공개된(Open),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Online) 무료 강의(Courses)를 뜻함. 대학의 저명한 교수들이 커리큘럼을 작성하고 동영상 강의, 퀴즈, 시험을 제공하여 실제 강의처럼 진행되는 특징이 있음

- 2011년 스탠포드대학교를 필두로 2012년 하버드대학교, MIT등 미국 최고의 대학교들이 강의를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하면서 MOOC가 탄생

〈3대 MOOC의 비교〉

구분	유다시티 (Udacity)	코세라 (Coursera)	에드엑스 (edX)
법인형태	영리	영리	비영리
설립	벤처캐피탈 자본 2천110만 달러로 설립	벤처캐피탈 자본 2천200만 달러로 설립	MIT 및 하버드대학이 6천만 달러로 설립
강좌	정보과학, 웹개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등에 관한 강좌	110개의 유명대학, 기관의 683개 가량의 강좌	전 세계 34개대학에서 제공한 200개 이상 강좌

자료 : 각 MOOC 홈페이지 및 위키피디아. 주 : 2013. 10.22. 기준

- 한국형 무크(K-MOOC)는 국내 대학의 강의를 일반인이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에 주력함.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4월 K-MOOC 시범운영 대학으로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10개 대학 총 27개 강좌를 선정하였고 하반기에 시범 운영할 예정
 -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KOCW(www.kocw.net) 강좌 중 활용성이 높은 것을 무크형 콘텐츠로 변환, 국내 190여 대학에서 기부한 1만여 건(2015년 7월 기준)의 강의를 무료로 제공됨

02 시사점

- MOOC 활성화는 지역, 성별, 연령,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교육기회를 확산할 수 있고, 교육비 절감, 거꾸로 학습(플립러닝)에 따른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
- 경기도는 경기도형 공개소프트웨어 복지 플랫폼(Welfare-MOOC)을 조성·지원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강화,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일반인 교육, 도민의 복지마인드 향상 제고 필요
 - 사회복지종사자의 열악한 재교육 환경을 강화하는 제반 학습관리시스템 구축에 적극 활용
 - 타 기관 MOOC의 양질의 콘텐츠 확보, 지속적으로 스타교수를 발굴하여 콘텐츠를 개발·제공함으로써 도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역량강화와 경기도민의 복지분야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
 -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위한 자격증과정 개설 등 전문교육 과정 운영 방안 모색

〈무크 사이트〉
 국외
 유다시티
www.udacity.com
 에드엑스
www.edx.org
 코세라
www.coursera.org
 퓨처런
www.futurelearn.com

국내
 서울대 스누온
<http://snuon.snu.ac.kr>
 숙명여대 스노우
www.snow.or.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OCW
www.kocw.net

2. 마이크로 칼리지, 노인의 새로운 일자리 진입 기회

01 주요 내용

- 최근 일자리 참여를 통해 인생 2막을 열어가는 고령자 계층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직업교육의 미흡 및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보완 체계 부족 등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과 노인 역량 간 미스 매치가 발생
- 기업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인력을 단기간에 수급하고, 구직자는 이직 및 역량강화의 기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크로 칼리지(Micro College)가 조명을 받고 있음
 - 토마스 프레이가 소장인 다빈치연구소는 미국정부 및 특허청과 함께 미래부상산업 및 일자리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단시간 내에 양성해 내는 '마이크로 칼리지' 과정을 운영
 - 마이크로 칼리지는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 '직업의 다양성', '직업변경의 욕구 증가'라는 구직자의 욕구와 '맞춤형 직업 역량 확보'라는 공급자의 욕구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3~4개월의 '단기 직업 (재)훈련-취업 패키지 프로그램'임

Nano Degree : Udacity에서 IT 관련 신기술 솔루션, OS 및 Data 핸들링 등 짧은 코스 과정으로 구직자를 훈련시켜 고용할 회사와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으로 신기술 초기 수요 기간 내에 구직자를 졸업시키는 동시에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프로그램 운영

- 마이크로 칼리지는 미래 신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교육한다는 점에서 노인 직업교육과 미스 매치한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퇴직한 노인이 새로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이전의 직업 경험과 전혀 다른 새로운(新) 직업교육을 받는다는 점에서 연계 가능
 - 4주~11주 정도의 강좌를 통해 새로운 직업과 직접 연결되도록 노인 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세컨드 잡(second job)을 찾고 있는 중고령 노인을 대상으로 훈련 및 직장 연결

02 경기도의 시사점

-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마이크로 칼리지(일명 시니어 마이크로 칼리지, SMC) 과정을 마련하여 노동시장의 재진입 및 새로운 직업으로의 이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형 G-MOOC 사업의 정책 대상을 노인 계층까지 확대하거나
 - SMC를 온라인 중심의 개방형 직업 교육시스템을 기본적 체계로 운영하되, 관련 직업의 실습 및 체험을 위해 도내 소재 대학들과의 MOU를 통해 오프라인 교육 체계 병행
- SMC 교육과정은 노인 연령별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인력 수요를 우선적으로 파악
 - 교육과정은 노동시장에서의 신기술 수요를 파악하여 구성하거나 SMC가 소재한 주변 지역 기업의 인력 수요를 조사한 후 수립하고,
 - 중고령 노인(55~64세)에게는 신(新)기술 등을 교육하여 재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장기적으로 노인 연령 조정(65세→70세)에 따른 복지 수급의 간극을 보완할 수 있는 연계 정책 수단으로 활용
 - 전기 노인(65세~74)이 노인 연령 조정(65세→70세) 정책 시행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65세에서 70세 사이 5년 동안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일자리제공 사업으로 활용

마이크로 칼리지는 구직자의 역량 강화 및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의미가 큼

경기도는 노인 계층을 대상으로 마이크로 칼리지 정책을 도입·추진하여 향후 연령조정에 따른 복지급여 수급 직전까지의 간극을 보완할 수 있는 연계 정책 수단으로 활용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주거의 새로운 대안, 공동체 주택이 뜬다

1인 가구의 증가, 보육, 어르신돌봄 및 공동생활 문제, 비싼 주거비 부담 등 주택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공동체 주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음

- 공동체주택은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 상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가는 주택으로, 세대별 주거공간과 공용의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주택이나 작은 주택단지를 의미함
- 이제까지의 공동체주택은 주로 토지와 주택 매입이 가능한 중산층 이상이나 비영리단체 등이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공급·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 최근 1인가구나 청년가구, 저소득가구를 위한 사회주택¹⁾으로서 공공임대형 공동체주택을 도입하자는 논의와 지자체들의 시도가 진행되고 있음
- 시도별 공동체 주택 사업 현황

지역	내용
경기도	노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노인공동체 주택으로 용인시 사랑의 집(2007년), 성남시 아리움(2009년) 등을 공급 주거·육아고민 해결을 위한 '보육주택' 추진 :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단지 내에 국공립 수준의 보육시설을 함께 입주시키는 형태로 따복공동체의 모델로 추진 예정
서울시	공동체주택 보급 확산을 위한 종합계획 발표(2014.10.) : 2014년 12월말 기준 7개 조직에 의해 400여 가구가 공동체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효자손 정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이 거주할 '원룸형 안심공동주택' 공급 예정
광주광역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개소의 공동체 주택 조성 계획 :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도시재생과 연계하고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와 연계해 공동체 회복이 가능한 자치마을모델을 제시하고자함

1)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경제적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을 의미

- 사회적경제조직에 의한 공동체 주택

구분	내용	
사회적 기업형	태평동락 (성남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66세대와 정주택 주택 12세대로 이루어졌으며, 주민교회 부지 위에 도시마을공동체를 위한 주택을 건설
	소행주 (서울, 성미산마을)	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해 마을기업을 조직하여 총 26세대가 공동체 주택에 거주
	Project OK (서울)	청년주거문제에 대응을 위한 사회적 벤처기업으로 사회초년생의 주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셰어하우스를 공급
협동 조합형	일오집 (부산 남구)	14개의 다세대주택과 1채의 커뮤니티 하우스로 구성. 개인 주거공간을 줄이고, 공동생활과 아이들의 놀이공간을 확보하였음
	이음채 (서울, 강서구)	육아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시 소유 주차장 부지에 24가구 규모로 건립
	구름정원 (서울, 은평구)	은퇴 후를 대비한 실버형 공유주택으로 4층 주택에 8가구가 거주

2. 경기복지재단, 제7기 복지경영 최고지도자과정 개설

- 복지경영 최고지도자과정은 경기복지재단이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및 경영학과와 공동개발한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교육과정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12주)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서 9시까지 진행됨

※ 교육신청 마감일은 8월 14(금)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참조

03 FACT CHECK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4% 인상

- 보건복지부는 '1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39만원(4인 가족 기준)으로 금년대비 4% 인상을 결정('15.7.26.)

중위소득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뜻함

〈 '15년 및 '16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15년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중위소득 '16년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 생계급여는 29%(127만원), 의료급여는 40%(176만원), 주거급여는 43%(189만원), 교육급여는 50%(22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
- 과거에는 최저생계비가 수급자 선정기준이자 급여수준이었으나, 개편 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급여수준은 급여 종류별로 정하는 '최저보장수준'으로 변화됨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이 동일(중위소득 29%)하며,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지역별 기준임대로, 의료급여는 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교육급여는 수업료 등임

최저보장수준 :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 혹은 보장수준

*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토대로 최근 3개년 가구 소득 증가율('11~'14) 4.4%를 적용

04 통계로 보는 복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취약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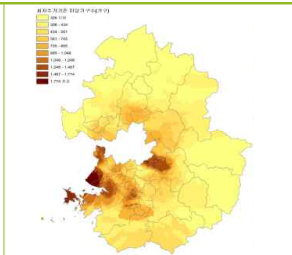
지하·옥탑방 등 거주가구 비율



경기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시·군 분포



자료 : 국토교통부(2014) 주택실태조사

자료/이미지 : 경기연구원(2014).

- 국토교통부(2014)에 의하면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 비율은 전체의 2.8%이며,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99만가구(5.4%)이며, 경기도는 420만8천가구 중 12만8천가구(3.0%)가 미달가구로 나타남
-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010)로 살펴본 경기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²⁾의 시·군 분포는 성남시(12.8%), 수원시(11.6%), 부천시(10.6%), 안산시(8.4%), 시흥시(2.4%), 안양시(6.3%) 등 구도심 지역에 밀집되어 있음
- 국토부의 주택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이고, 인구주택총조사는 2010년 조사자료로 시의성이 낮아 현실성 있는 주거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함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국토해양부)
- 시설기준 :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 시설이 없는 경우
- 면적기준 : 1인 기준 14m²

2) 자료 : 경기연구원(2014). 「마을단위 주거 복지, 노후주거지 재개발의 대안」